

의료인 안전 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광수 의원 대표 발의...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의료인을 폭행한 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을 강화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인 안전 보장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임장 대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임장 대안)은 의료인을 폭행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의료인을 폭행한 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며, 의료기관의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출입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토록 했다.

현행법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는 행위 또는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하는 행위 등을 한 사람에 대해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및

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7월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료인이 술을 마신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후에도 강원도 강릉 전문의 폭행, 경북 구미 응급센터 전공의 폭행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며 의료인의 안전 확보에 대한 관심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었다. /김진성 기자

실제 김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현황'에 따르면 응급의료 종사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등으로 방해하거나 응급의료를 위해 검거된 인원이 2013년 152명에서 2017년 47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지난해 8월 29일,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은 해당 의료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하에 의료인 폭행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인 안전 보장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 했으며,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진성 기자

내일 전북도의회 임시회 개최

11일간 의정 돌입... 도 추경예산안 증액 심의

전라북도도의회(의장 송성환)는 오는 9일 제362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11일간 회기일정에 들어간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내인권 의원 등 5명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돼 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전라북도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22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세부일정을 보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의안 심사를 하고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전라북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등에 관한 조례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조속 추진 및 소방 안전교부세를 확대 촉구 건의안' 등 총 22건(조례안 11, 예산안 2, 동의안 8, 건의안 1)의 의안이 각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심의한다.

이번 제362회 임시회는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위원회에서 처리한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드론산업 육성 제도적 기반 마련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육성·지원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드론산업 육성·지원법'(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대한민국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으로서, 작년 국내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및 드론의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기존에 드론은 항공, 우주, 과학기술 등 산재된 법령에 따라서 지원 관리되는 등 드론과 관련한 특별법이 미비했다. 이로 인해 생애주기별 지원규정의 연계성 부족, 일괄적인 규제특례 근거 부족 및 부처별 단편적

정책 추진에 대한 문제점 등이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전문드론은 미국이 세계 선두이고, 상업용 드론은 중국이 세계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후발주자인 한국도 드론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고, 고층, 사천에 이어 전주시도 본격적으로 드론산업 육성에 뛰어 들었다.

전주시는 치열한 경쟁 끝에 드론산업지원센터에 필요한 예산 2억(총 사업비 215억)이 2019년 예산에 확보되어, 한국 최초로 전주시 조촌동 월드컵 경기장 일대에 드론제작 기술센터가 들어설 전망이다.

또한 드론산업국제박람회 개최를 위한 국비예산(3억)도 확보했다. 이로 인해 조선소 자동화, 채굴소 등 산업화 건설 시대에 낙오했던 전주시가 항공촬영, 농약방제, 원격통신, 스마트 시티 등 드론산업 대열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4차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 /김진성 기자

보건의료 노동자 처우개선 '첫 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5년마다 종합계획 마련

정부가 원활한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지자체, 의료기관 등과 적정 노동시간 확보 등 노동환경 개선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6년 특별법이 이 발의된 이후 8개 법률안이 병합·심의된 결과다.

우선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 인력 양성 및 공급,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복지 향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한다.

현재 5년 주기인 보건의료실태조사는 심층적인 실태·특성 파악을 위해 3년 주기로 앞당긴다. 해당 조사에선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 활동 현황과 근무 환경 등을 조사하도록 해 종합계획 수립 근거로 활용한다.

보건의료기관장은 인권침해 대응지침을 마련해 준수해야 하며 복지부 장관은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인력을 대상으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



이재민 위로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천진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장동욱 함상애 부부)을 위로하고 있다.

행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장 등은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보건의료인력전문기관으로 지정된다. 이 기관은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지원, 위원회 운영 지원,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 지원, 조사·연구, 통합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뉴시스

'일하는 국회법' 본회의 통과... 월 2회 이상 법안심사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를 정례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52명 중 찬성 237명, 반대 3명, 기권 12명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린 이번 개정안은 국회 내 각 상임위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두 개 이상의

소위원회와 두고 소위는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 하는 것이 골자다.

상임위의 법안심사 정례화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해온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운영위에 제안한 바 있다.

국민 전자정원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몰카 음란물'로 번 돈 몰수 가능

범죄수익 은닉 규제·처벌 등 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불법 촬영 음란물을 웹하드에 올리거나 등 디지털 성(性)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조치가 강화된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배포 행위와 카메라

이용 촬영 및 배포 행위를 중대 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범인이 범죄수익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기 전 수사 과정에서 몰수·추징 보전명령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범인이 범죄수익을 다른 곳에 숨기거나 적법한 수익을 위장하게 된다면 자금세탁 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뉴시스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